‘550억원대 배임·횡령’ 이상직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일벌 백계해야”

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회사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했고,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되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가족의 미국 생활비와 딸의 포르쉐 임차비 등 개인 사익만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구조적·반복적으로 관여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했으며 실질적 이득을 취해놓고도 피해를 변제한 바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수상태양광 관계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를 기념해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 의회 승인절차 필요”

김희수 도의원 “갑질감사에 도내 교육관계자들에 송구”

최근 전북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현재 직무배제 중)의 갑질감사에 설왕설래 하면서, 도교육청 감사관 임명을 전북도의회와 함께, 임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내 국장 및 과장 등의 임명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지만,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만큼은 교육감이 감사관 후보를 배수로 추천해 도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은 “금번에 벌어진 도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의 갑질감사에 도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관계자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결국, 이번 갑질감사와 관련해 감사관 임명에 투명함을 담보한 임명 절차 순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주장은 도교육청 교육감이 감사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닌, 도의회에서도 함께 ,감사관 임명에 절차를 함께 밟아나가자는 것이다.

김희수 위원장은 “감사관은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수준까지 받게 하는 강압적인 감사로 소문났다”면서 “이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겠느냐”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의회 교육위도 전북교육의 큰 틀에서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도내 교육현장의 투명한 감사와 형평성이 담보된 감사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감도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후광’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함께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기업 지원은 행정의 책무”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전북도시가스 등 찾아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두 번째 일정으로, 지난 16일 전주주조, 23일 고려자연식품과 전북도시가스, 24일 소유브랜딩을 방문했다. 사진은 전북도시가스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우범기 전 부지사(사진 가운데).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두 번째 일정으로, 지난 16일 전주주조, 23일 고려자연식품과 전북도시가스, 24일 소유브랜딩을 방문했다.

우범기 전 부지사의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은 전주 지역 기업을 순차적으로 돌아보고, 강한 경제를 위해 기업·대학·연구소·지자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자는 데 있다.

전주주조(대표 하수호)는 전주모주·막걸리 전문업체이며, 고려자연식품(대표 홍성윤)은 유자차·비빔밥 수출업체로 전북지역 스타기업이기도 하다.

전북도시가스(대표 김홍식)는 전주시 등 7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소유브랜딩(대표 정지운)은 산업디자인 전문 업체이다.

이들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행정이 물류비, 고급인력 등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과감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범기 전 부지사는 “기업이 돈 잘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행정의 책무이다”며 “행정은 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장 관련 인권침해 접수

국가인권위로 이송
도 인권담당관실 접수
인권침해건 조사대상
아니라는 판단에서

폭언과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갔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된 송 의장 관련 인권침해 신청건을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로 이송처리했다.

도의원의 경우 ‘전라북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상’ 도 인권담당관실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조례에 따른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원, 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한정돼 있다.

향후 국가인권위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조사할지, 서울에서 직접 조사할지를 본부에서 정할 전망이다.

한편 송 의장은 최근 의장실에서 도의회 사무처장 A씨(2급)를 상대로 의전 등을 문제 삼아 심한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며, 해당 사무처장은 도 인권담당관실에 조사신청을 접수하고 휴가 중이다. /뉴시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박용근 도의원, “악질·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 나서라”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4일 제386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가 악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취득세·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2021년 9월 말 기준, 전북도 체납액이 231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다”라며 “체납징수 전담팀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총사업비 일정 기준 설정을”

농산경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 심사서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활용도 당부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4일 제38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에 대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총사업비와 관련해 재원비율이 사업마다 상이한데, 비율이 상이하면 자부담이 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부담률을 책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도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전주시와 완주군 및 전문가를 활용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혁신도시 기지제 주변이 유·무료주차장 및 갓길주차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공원 내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전주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사업 정비해야”

교육위, “신청기관 저조로 전년보다 줄어드는 이유 분석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도교육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교육위원들은 도교육청의 정책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의 예산안을 보고받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이 신청기관이 저조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 평생교육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도교육청으로 제대로 전출되지 않아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도청의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을 적극 확보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신규 사업인 독도체험관 운영에 대해 “역사교육은 현장에서 배울 때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며 “독도체험관을 만드는 것보다 학생들이 독도에 방문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농어촌 어린이집 추가 지원 계획 마련을”

환복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심사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4일 복지여성보건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예산 및 기금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11)은 “외국인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훈공원 조성 사업계획 산출내역에 따르면, 호국영령탑 설치비가 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변경됐고, 전시관 콘텐츠는 기존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요구한 것이 타당한지 묻고,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근무경력 5년 전후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평등한 수당지급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촌 어린이집 폐원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추가 지원을 위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일잔재 청산 적극 나서달라”

행자위,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4일 자치행정국 소관 등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친일잔재 청산문제에 대한 지지부진한 추진과 내년도 관련 자문위원회 예산(300만원)을 너무 적게 계상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잔재 청산문제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높여야”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은 24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당초 취지인 도내 장기체류 여행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숙박 여행객과 외국인 유학생에게 단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전북무용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보조금법 위반 단체에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